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등 정부, 총 9조3000원 긴급 투입...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당초 '3조원+α'로 정했던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임차료,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000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날 8일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에도 하루 1000명 안팎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지난 22일부터 수도권은 '2.5+α' 단계로 더욱 강화됐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을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 위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집중되면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피해가 커지자 '3조원+α'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긴급피해지원(5조6000억원) 뿐 아니라 방역강화(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

키(2조9000억원)를 묶어 총 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580만명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초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1~3월분에는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

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 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8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호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와 지역상품권 조기 집행 등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40만명 분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를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도 3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비담목 자금은 1월6일 사업공고를 시작해 11일 안내문자 발송과 온라인 신청을 거쳐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11일까지 신청접수 한 뒤 설 구성 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의정 발전 기여 유공자 12명에 표창 수여

전북도의회는 도의회 의정실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29일 표창을 수여했다.

도의회는 매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전북도 총무과 장태성, 정규동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 이영걸 ▲전북도 정무기획과 김영임 ▲전북도 구조구급과 나용선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박상준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이태경, 김태진 ▲전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강성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이경현, 전상미 ▲전라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소민섭 등 12명이다.

송지용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호상 기자

대한드론축구협회 감사패

전주시의회 강동호 의장, 이미숙 부의장, 송영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29일 (사)대한드론축구협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각종 대회 성공적 개최 및 드론축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협회는 평소 드론축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드론축구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드론축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전북도선관위, 내년 1월 1일자

4~5급 승진·전보인사 단행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자로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4급(서기관) 인사에는 ▲정석운 전북선관위 총무과장 ▲고형진 군산시선관위 사무국장 ▲이강욱 익산시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전보됐다.

또한, 5급(행정사무관)인사에서는 ▲유창식 진안군선관위 사무과장이 승진했다.

이외함께, ▲김재찬 전북선관위 총무과 총무담당관 ▲박종범 전북선관위 지도과 지도담당관 ▲임찬희 전북선관위 지도과 조사담당관 ▲이규수 전북선관위 선거담당관 ▲송승현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선거담당관 ▲김진만 무주군선관위 사무과장 ▲조기원 장수군선관위 사무과장 ▲전영기 고창군선관위 사무과장 ▲이주상 부안군선관위 사무과장 등이 전보됐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RNA 백신 특구 조성 위한 정책 필요"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RNA 백신의 급부상과 전북도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과 박용근 의원, 김현진 (슈니스 대표이사,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 원광대학교 이성희 교수, 우석대학교 강민구 교수,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이영미 단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참석했고, 김현진 대표의 발제 이후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현 정부는 전북도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나, 전북도가 큰 사업이나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정부의 큰 의지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기업이 '코로나19 RNA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 RNA 백신은 전북도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특구를 시급히 조성하는 한편,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등 지역 현안과 연계시킨다면 향후 무수히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내년 문화재보수 정비 전북지역 275억 국비 확정

정읍·고창 총 57억6000만원... 민주 윤준병 의원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 기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활약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9일,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정읍고창지역에 국비 57억6,000만원이 확정되는 등 전북지역에 총 275억원의 국비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읍지역은 전봉준 유적 및 고사리 부성, 김명관 고택 등 15건에 17억 3,600만원이 확정되었고 고창지역은 고창읍성, 선운사, 신재호 고택 등 25건에 40억 2,600만원의 국비가 배정되었다. 전북지역은 총 163건에 275억원의 문화재정비사업 국비가 확정됐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준병 의원은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으로 정읍고창 57억 6천만원을 비롯해 전북지역에 총 275억원의 국비 배정이 확정되었다"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우리가 꿈꾸는 대학은
순수와 열정으로 세상을 흔드는
학생이 중심인 따뜻한 대학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국립군산대학교

교육혁신의 선두!	산학협력의 강자!	글로벌 인재의 요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 해상풍력 타빈 해상실용 기술 개발) 선정

